

# “양승태 사법부 철저 수사해야”

### 중앙지법 단독·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들 “성역없는 엄정 수사 촉구” 한목소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일선 판사회의의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우리는 전임 대법원장 재직 기간 동안 사법행정 담당자의

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도 같은 시간 회의를 열어 수사 촉구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의결했다.

이들은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법관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은 수사와 함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드러난 미공개 파일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앞서 1일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도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판사회의는 이날 계속해서 열릴 예정이다.

오전 11시40분에 회의를 시작한 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오후 5시30분에 회의를 속행한다. 중앙지법 배석 판사들은 오후 4시에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뉴시스

# “제복공무원 존중해야 폭행은 중대 불법행위”

### 정부, 대국민호소문 발표

정부는 4일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정부서출장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국민호소문에서 국민들에게 공동체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응원·격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적법한 직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당한 제복공무원이 연령군 700명에 이를 정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이유 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들의 분노표출과 갑질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며 사랑스러운 친구·연인이다.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주정부의 공권력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친절하지만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치 않으면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조금만 더 사회적인 경각심만 있다면 이런 수준의 아이없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며 “특히 주취자에 대한 지나친 관용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권력을 강조하면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 “갑질행위로 고통받아 공권력 신속 작동치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돼”

이철성 경찰청장은 “현장에서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이 준 제복을 입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공무원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며 “경찰에서 공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꼭 인권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침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전체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각종 재난과 위급한 상황발생 시 119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소방청은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력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이런 호소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공무원집행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한 당당한 해양경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성원과 격려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뉴시스



“전북 복지실현 요구합니다” 전북 복지 실현을 위한 4대과제 11대 공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북북사회복지 특별위원회 관계자들과 배내전 전북도 사회복지사협의회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MB “도곡동? 어디 땅 살 데가 없어서...”

### 2차 공판 출석, 증거조사 도중 직접 발언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두번째 공판에서도 직접 입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증거조사가 진행되던 중간에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이번엔 자신의 차명 재산 관련 의혹의 시발점 격인 ‘도곡동 땅’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근래에 문제가 되고 나서 보니 현대가 가지고 있던 체육관 경계에 붙어있는 땅인 걸 알게 됐다”며 “제가 현대 7~8개 회사 대

표를 맡았다. 정주영 전 회장 신임을 받고 일하던 사람이 어디 살 데가 없어서 현대 땅과 붙은 곳을 사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압구정에 땅 살 곳 얼마든지 있다”면서 “내가 현대건설 재임 중에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한 것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딱 내 땅이다. (내가) 투자한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현대에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땅 매입 혹은 투자)하려면 더 좋은 곳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세광공

업(다스 협력업체) 노조 갈등 당시에도 울산공장에 내려가서 회의에 참석했다는 부분은 기억하냐”라고 묻자 “그런 기억이 없다. 작은 회사에 노조가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할 위치가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세공인지 하는 그 회사에 그런 게 생겼다고 해서 보고를 받고, 그 정도 사람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 건강을 숨기고 평생을 살았지만 교도소에 들어오니까 감출 수 없게 됐다”며 “법무부에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서 치료를 좀 받고 오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 야3당, ‘드루킹 특검’ 후보 임정혁·허익범 추천

야3당 교섭단체는 4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 등 2명을 추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명의 특검 후보자 가운데 이들 2명을 선정·발표했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야3당 교섭단체는 변형으로부터 후보 4명을 추천받아 이를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뉴시스




##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